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hatsnew.moef.go.kr

이 자료는 2022. 6. 30.(목)
10: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책자는 2022. 7월초 배포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정부
korea.kr

https://whatsnew.moef.go.kr

1 기획재정부

자세한 내용은 p.4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는 유류세를 30%(탄력세율 기준) 인하해 왔습니다.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30%(현행)
휘발유	820	573(△247)
경유	581	407(△174)
LPG부탄	203	142(△61)

(단위 : 원/ℓ)

After

앞으로는 유류세 인하 폭을 37%(탄력세율 기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합니다.

유종	△37% (개정)	추가 인하폭
휘발유	516(△304)	△57
경유	369(△212)	△38
LPG부탄	130(△73)	△12

(단위 : 원/ℓ)

2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2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소상공인 ·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상환일정 조정, 금리감면, 원금감면 지원



3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3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시행일 : 2022년 3분기

Before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60 ~ 70%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LTV 현행 : 60~70%

* (투기 ·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After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완화 80%

https://whatsnew.moef.go.kr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6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 인공지능이 교육현장에서 안전하게 학습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 형성 및 자율규제의 촉매제로서 윤리원칙이 마련됩니다.



2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 청소년기에 임신 · 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2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난 극복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2022년 하반기부터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원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40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강화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Before

지금까지 농업인안전보험으로 농작업 재해로부터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After

농업인을 위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일반1·2·3형)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 일시금 지급 →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2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1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4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2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납부예외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4 고용노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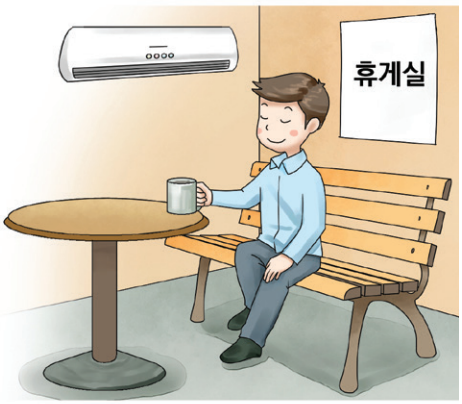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47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를 시행합니다.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 · 관리기준 준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



https://whatsnew.moef.go.kr

1 문화재청

자세한 내용은 p.64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시행일 : 2022년 7월 19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 체계가 마련됩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대전환이 급격하게 이뤄짐에 따라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68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9월 25일(1차)
2023년 9월 25일(2차)

'22.9.25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중 · 장기 기후변화영향이 높은 10개 분야 계획 및 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분석·평가합니다.



- 에너지 개발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 도시개발
- 수자원 개발
- 항만 건설
- 산지 개발
- 하천의 이용 · 개발
- 도로 건설 ('23.9.25일 시행)
- 공항 건설 ('23.9.25일 시행)
- 폐기물 · 가축분뇨 처리시설 ('23.9.25일 시행)

2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69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산업제품위주로 구성되어 국민들이 환경표지 인증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증대상이 산업용 제품위주, 정성적인 환경성 평가

After

이제는 국민들에게로 환경표지 인증이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생활밀착형 제품 확대, 상위 30% 수준으로 인증기준 강화
(노트북 등 6개 품목)

3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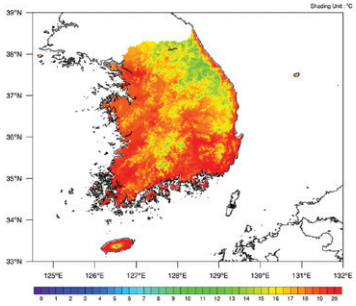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79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시행일 : 2022년 12월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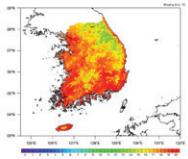
기존에는 격자(해상도)별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After

격자자료 활용이 어려운 일반 사용자를 위해
전국 3,500여 개 읍 · 면 · 동별로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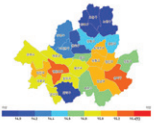
〈격자별 미래 평균기온〉



〈광역시도별 미래 평균기온〉



+ 〈서울시 구별 미래 평균기온〉



4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80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기존 날씨알리미 앱은 가독성, 편의성 등이 미흡하고,
원하는 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fter

저시력자, 고령층 등 취약계층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날씨알리미 앱을 전면 개편합니다.



https://whatsnew.moef.go.kr

1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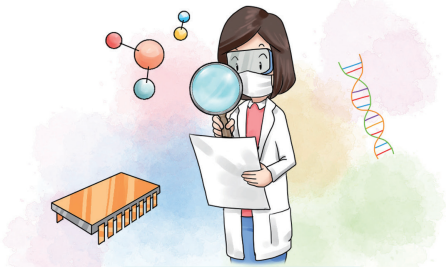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89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경제안보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전화, 기술·인력보호 등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전략기술·인력의 보호

2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90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시행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 불확실성 해소
- 선도사업 발굴·지원, 계약 가이드라인, 표준화, 플랫폼, 협업 지원센터 등 민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지원 제도 근거 마련



산업 DATA 활용

- 산업 디지털 전환
- 산업 디지털 전환위원회 구성·운영
- 산업 디지털 표준화
- 산업 디지털 규제개선
- 산업 디지털 활성화 지원

https://whatsnew.moef.go.kr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0

농지 임대차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Before

지금까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현황 정보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파악하여 작성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농지이용정보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1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시행일 : 2022년 8월 18일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 취득 심사 시 농지위원회 심사가 의무화됩니다.

-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자는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함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2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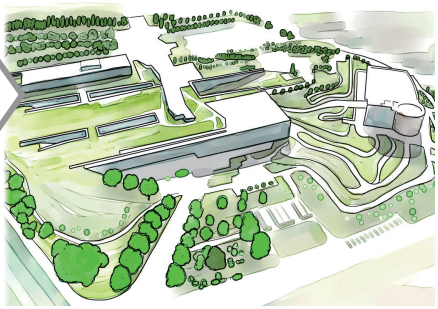
Before

유구한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After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개관합니다.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3

동물의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Before

지금까지 수의사가 수술·수혈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진료에 관한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음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4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시행일 : 202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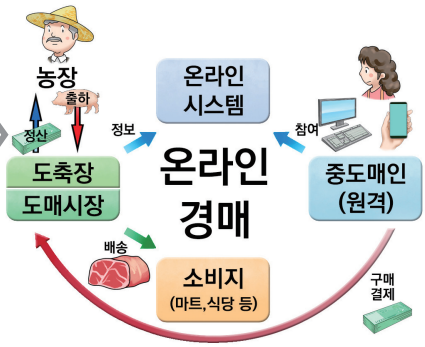
Before

종전에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기반 마련에 힘써왔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를 본격 도입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15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시행일 : 2022년 6월 1일

Before

지금까지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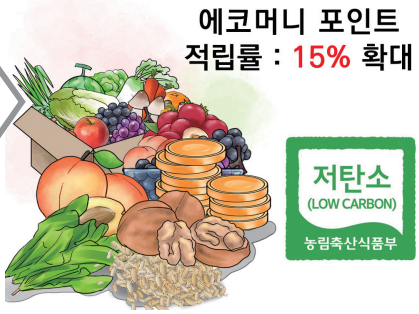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 9%



After

앞으로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을 확대합니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 15% 확대



7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26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시행일 : 2022년 8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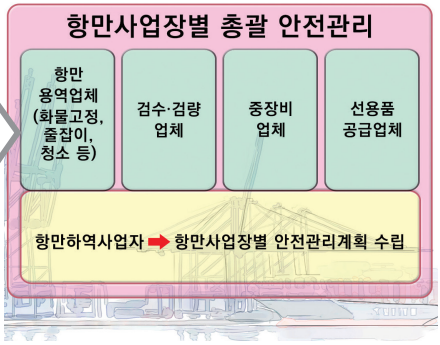
Before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안전관리



After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8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13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시행일 : 2022년 10월 1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합니다.

-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 종사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합니다.



1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6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군 사법제도 개편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Before

- 군인 등이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 행사
- 국방부와 각 군에 군사법원을 설치 및 운영
-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제도 운영
- 군사법원의 재판부를 군판사와 심판관으로 구성
-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 설치



After



-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
- 군사재판 항소심(2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각 지역 군사법원을 설치 및 운영
- 관할관제도 폐지
- 심판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판부를 군판사 3명으로 구성
-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 설치

2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7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Before

기존에는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는 11,000원이었습니다.



After

장병의 급식만족도 향상을 위해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3,0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합니다.



3 국방부

자세한 내용은 p.138

장병내일준비적금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시행

시행일 : 2022년 6월

Before

기존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시
국방망 인사정보체계에서만 가입 자격확인서 발급 승인이 가능하였으며,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밖에 없어 적시에 은행 가입이 제한되는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가입자격확인서 메일링서비스'및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를 시행하여
'나라사랑포털앱'을 통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장병내일 준비적금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온라인 비대면 가입체계 적용 : 국민은행, 기업은행 시험 적용

4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39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서울·대구·광주·대전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After

앞으로, 부산·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

1 외교부

자세한 내용은 p.153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시행

시행일 : 2022년 5월 31일

Before

차세대일반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는 내용으로 「여권법시행령」이 시행(2021.12.21.)되었습니다.



After

종전 일반여권의 재고분을 저렴한 발급 수수료로 병행발급이 가능하도록 「여권법시행령」을 개정합니다.



2 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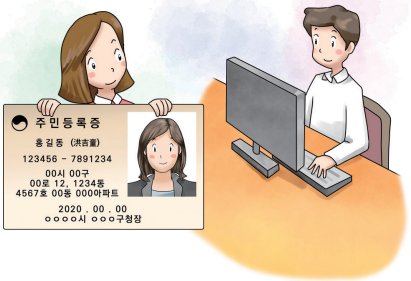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5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Before

지금까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됩니다.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57

온라인 청원 및 공개청원 전면 시행

시행일 : 2022년 12월 23일

Before

지금까지는 청원은 청원기관에 서면으로만 제출이 가능하였고, 공개청원제도는 없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서면으로 제출하던 청원을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공개청원제도도 새롭게 시행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0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Before

기존에는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사업자·사업자단체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공정거래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1

광고·판촉행사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실시

시행일 : 2022년 7월 5일

Before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비용 분담금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After

앞으로는 비용을 분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가맹점주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6 국가인권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88

군인권보호관 제도 시행

시행일 : 2022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군인권 개선에 힘써왔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직권조사
군구금시설 방문조사

After

앞으로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됩니다.



군부대 장병면담 및
군인권상황 조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의무 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입회권한 부여



1년 이상 경과하였어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함